

“지방분권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전북도의회 포함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 사무처 직원들 국회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천여 명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 등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방자치 부활 27년, 청년기를 맞았으나 여전히 유아기 옷을 입고 있는 말쑥한 지방자치”라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파

도한 권력과 권한이 집중돼 있어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목적을 높였다.

이어 “양극화, 지역불균형, 사회갈등,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에 입법 · 행정 · 재정권을 이양, 지역 스스로 정치 · 경제 ·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양이 아닌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권력의 균형 유지를 통해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는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시작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

문 인력 도입 등을 위한 법령을 제 · 개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자체에 외교 · 국방 등 국가의 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 자치입법 · 행정 ·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한편 이날 송성환 의장은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 조례제정을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서 행정부의 명령으로 지방의회를 구속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국체전 출전 인도네시아 해외동포선수단 ‘송 지사에 감사의 글’ 전북도 홈페이지 게재

제99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인도네시아 해외동포선수단이 전북도 홈페이지(도지사에 바란다)에 송하진 도지사에게 감사의 글을 올려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감사의 글을 올린 주인공은 해외동포 선수단으로 113명이 출전한 인도네시아팀 방진학 사무총장이다.

방문초기에는 숙소 및 차량문제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전북도청

을 비롯한 인주군청 직원이 너무 열심히 도와 주셔서 끝나는 날까지 잘 있다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북도는 전국체전 기간 동안 해외동포선수단 경기출전에 불편이 없도록 17개 국가별 전담지원팀을 구성 운영하여 숙소, 교통, 경기지원 등을 적극 지원했다. /김진성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체전 등 헌신한 직원들 노고 치하

정현을 익산시장이 22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국체전과 의회업무 보고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앞으로 열린 전국장애인체전과 국회축제, 의회 결산보고 등에도 마무리(馬不停蹄)의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이번 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데는 시민 서포터스와 자원봉사자, 익산사람추진협의회 등 익산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큰 관심을 보여준 덕분”이라며 “그리고 그 뒤에는 이 같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민본의 준비와 원활한 대회진행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 준 우리 직원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안다”고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덧붙여 “올해 10월은 익산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행사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등이 집중되어 직원들이 더욱 고생이 많다”면서 “가정에서도 큰 일을 치르다보면 평소 깨닫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이번 체전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직원여러분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숭선수범해 주어 더욱 든든했다”고 각별한 치하의 말을 전했다.

제99회 전국체전은 체전기간인 7일 동안 약 9만여 명이 익산을 방문하며 지난 18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현재 일주일간의 재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5일간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되며, 다음날인 26일부터는 익산의 대표축제인 제15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중앙체육공원에서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최근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 513호 세미나실에서 ‘2018 전북도 문화관광 포럼’이 열렸다.

전북 문화관광 발전방안은?

전북도 문화관광포럼 성료 역사문화콘텐츠 등 제시

전주대학교 문화관광종합연구소가 주최하고 관광의식서비스연구소, 문화관광콘텐츠 커플링사업단이 주관한 ‘2018 전라북도 문화관광 포럼’이 최근 지역혁신관 513호 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포럼은 송광인 문화관광종합연구소장(전주대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호운 위원장(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의 축사와 변주승 교수(전주대 산학협력단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정호운 위원장은 “문화건설안전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다각적인 시

도와 노력으로 일신우일신 하는 전북관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전북 관광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의 1부에서는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심영국 교수가 ‘서비스 품질 향상 전략 Professional Management’를 발표했으며, 관광서비스경영학과 박사과정의 오승욱 씨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의 모델로서의 관광두레사업’을, 글로벌경영학과 석사과정의 김광숙 씨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각각의 발표를 바탕으

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의 좌장은 송광인 소장이 진행하였고, 박명용 과장(전라북도 관광총괄과장), 박상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신상준 교수(호원대학교), 정혜정 교수(전주대학교), 최형재 대표(전주희망연구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주대 송광인 소장은 “이 포럼을 계기로 문화관광 산업의 미래를 위해 각 분야마다 노력하고 계 획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숙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문화관광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럼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교류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산단 산재예방 안전문화 확산

전북도 재해예방 결의대회 결의문 낭독 · 안전 보건인 표창 안전 보건 골든벨 등 열려

전북도와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는 22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도내 산단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해예방 결의대회’를 했다.

이날 김승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 김동경 회장, 고용노동부 지정장, 안전보건공단 지사장, 안전, 보건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정부는 국민안전에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자수 절반 감축’을 위한 ‘국민생

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설,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안전,보건인들이 산업재해예방 결의대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재해감소와 안전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산재예방을 위한 전북도의 특색을 고려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마련됐다.

본 행사는 △재해예방 결의문 낭독 △우수 안전보건인 표창 △안전 보건 골든벨 등이 열렸다.

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제의 도정 방침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이며 산업현장 및 생활 속에 안전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구축해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 증빙서류 허위기재

익산선관위, A모 후보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

전라북도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익산시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허위기재 등 혐의로 후보자 A씨를 2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현저히 초과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 · 제출한 혐의

가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정치자금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할 수 없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